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5.25 법률 제848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부의 시책 등)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③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에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④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 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구성)

- 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의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

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 ③ 협의회의 업무·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 ④ 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의 사업자로 본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하여금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집

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기술 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 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출입·체류자의 보호

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②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 ③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료기관 등)

-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 ②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인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 1. 「근로기준법」
 - 2. 「최저임금법」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4. 「임금채권보장법」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

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왕래와 교역의 특례)

- ①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제3절, 제9장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 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개성공업지구의 왕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③ 개성공업지구를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 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단” 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차입금
- 3. 수익사업의 이익금
- 4. 그 밖의 수입금
-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484호, 2007.5.25>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의무는 제19조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7.9.20 대통령령 제202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작성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주요 사항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주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통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관세청·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남북관계와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협회의의 운영)

- ① 협회의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협회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협의회에 출석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위원장의 요청으로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협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5조(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 2.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 및 철도
 - 2.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 시설
 - 3.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 4. 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 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②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절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8조(사전 협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건

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의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7. 「중소기업기본법」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0.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② 정부는 제1항과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

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남한주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분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
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제11조 (관할)

-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접경
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
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
-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
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
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
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는
경기도지사 또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
는 수행한다.
-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
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
경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노동관
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4.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 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
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
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
한 또는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 ⑥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
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
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
독관의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

독관의 권한

-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 노동부장관
- 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 나.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단위노동조합
2.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 경기도지사
3. 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 파주시장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의 수는 남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받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사용자가 위 각 호의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

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조세·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

제13조(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간을 통행하려는 자는 통행차량 등록신청서를 접경지세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접경지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통행차량등록 신청으로 본다.

다른 첨부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 ①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을 받은 접경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행차량증명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경지세관장은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통일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5조(출입확인 및 출발·도착의 보고)

- ① 도로차량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때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입확인은 전자식 판독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확인을 거친 차량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에

제16조(반출·반입의 신고 및 검사)

- ① 개성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와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반입 신고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반출·반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반입 신고서 및 관련 구비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투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구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거나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 서류제출대상 선정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출입심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남한 주민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9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

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정관)

- ①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설립등기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2조 (임원)

-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⑥ 이사의 수와 상근으로 하는 이사의 대상 및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상근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24조(이사회)

-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 ② 국유재산 관리청은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이하 “자산”이라고 한다)을 그 양여·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그 양여·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할 수 있다.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 재산의 관리)

-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 ② 재단은 매년 자산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자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재단이 무상대부 받은 개성공업지구 내 자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해당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른 관리청의 권리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29조(임직원 등의 파견) 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지도·감독 등)

-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 ① 법 제20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근무 중의 복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무 내용, 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파견할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0281호, 2007.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